

이슈브리핑

2017년 국정감사 알아보기

2017년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동안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국정감사와 2017년 국정감사 핫이슈를 살펴보자!

1 국정감사란?

□ 국정감사 의미

○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수행함.

□ 국정감사 특징

○ **정기성** :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 비정기적으로 불특정기간에 실시되는 국정조사에 비하여 정기적임.

*정기회 :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시기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는 회의. 국회법은 정기회가 9월 1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상임위원회 중심** :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국정감사계획서의 작성이나 국정감사결과보고의 주체는 상임위원회임.

**상임위원회 : 국회에서 각 전문 분야로 나누어 조직한 상설 위원회. 16개 상임위원회(국회운영·법제사법·정부·기획재정·외교통상통일·국방·행정안전·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해양·정보·여성가족)

□ 국정감사 대상 기관

국가기관, 특별시·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및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

2 2017년 국정감사 이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는 2000년부터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하고 있음. 올해 우수 국감 의원들의 의제와 그 외 이슈사항을 살펴보자!

□ 법제사법위원회-노회찬(정의당)-국정농단 사법 특혜 관련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관여자들이 하루 1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구치소장과 잦은 면담을 갖는 등 황제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
- 지난 8월 24일 기준, 박 전 대통령은 총 수용일수 147일 동안 148번 변호인 접견을 가지고, 총 24번의 교정공무원 면담 중 12번을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면담함. 또,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이나, 박 전 대통령은 5배 넓은 공간인 10.08㎡의 거실을 혼자 사용함.
- 게이트 관여자로 함께 구속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총 구금일수 178일 동안 214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은 285일 동안 294번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남.
- 노위원은 변호인 접견은 피고인의 권리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권력만 있으면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이라고 비판
※ 변호인 접견권 -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

□ 보건복지위원회-정춘숙(정의당)-심평원의 국민건강정보 민간회사 판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3년간 KB생명보험과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민간보험사에 국민들의 진료정보 등을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짐.
- 정춘숙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평원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진료내역과 처방내역 등이 포함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약

6,420만명분)을 제공.

- 민간보험사 등이 받아간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성별과 연령 등을 담은 일반내역 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등이 포함됐다.
- 정 의원은 보건의료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지원하기 만든 심평원이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복지부와 건보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공동기준을 검토할 것을 촉구함.

□ 보건복지위원회-윤소하(정의당)-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문제

- 현재 약사법상 통관을 거쳐 해외에서 수입된 해외 의약품을 제외하고 국내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모두 불법임.
- 윤소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조치가 10,912건에서 2016년 18,949건으로 4년만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의 유형별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발기부전치료제가 10,342건, 최음제 1,615건, 종합영양제가 998건임. 온라인 판매 의약품의 경우 위조, 변조 가능성 및 품질 보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불법 의약품의 경우 제조, 수입, 유통에 대한 추적 자체가 곤란해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지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윤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데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모니터링 강화밖에 없으며,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함.

□ 정무위원회-전해철(더불어민주당)-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슴기살균제 처리 문제

- 가슴기살균제 사건 처리 당시 공정위의 위법성 인정 여부 판단의 핵심은 'CMIT/MIT를 사용한 가슴기살균제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였으며, 2017년 9월 환경부가 공정위에 회신한 '가슴기살균제 인체위해성 관련 의견조회'를 보면 2015년 이미 인체위해성에 대해 환경부가 인정했음. 그럼에도 공정위는 환경부로부터 CMIT/MIT 함유 제품에 대한 어떠한 공식 의견 조회도 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해 심의절차를 종료. 당시 주심은 인체 유해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등 사실관계 확인 곤란하다는 근거를 내세워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내림.

※ CMIT/MIT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의 혼합물.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높으며 자극성과 부식성이 커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줘 미국 환경보호청은 1991년 이를 산업용 살충제로 등록하고 2등급 흡입독성물질로 지정

- 전 의원은 환경부가 2015년 4월부터 CMIT/MIT 함유제품을 단독 사용한 사용자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어 공정위가 의지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받고, 객관적으로 수용했다면 위원회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비판함.

□ 기획재정위원회-김정우(더불어민주당)-수출입은행 다스 히든챔피언 선정과정과 대출 이자율 특혜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일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던 것으로 나타남.
- 김정우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10년 수은 히든챔피언 선정위원들에게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심사보고서에는 다스 최대주주인 이상원과 김재정이 각각 이 전 대통령의 친형과 처남이라고 명시돼 있음. 해당 자료에 따르면 다스는 선정위원회에 부의된 43개사 중 1·2차 정량평가 점수가 60.7점으로 가장 낮았지만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가 최종선정한 35개 기업에는 포함됨.
- 김 의원은 운영위원회에 보고된 검토보고서에 최대주주가 당시 현직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내용을 적시하면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며, 수출입은행이 2004년 다스에 60억 원 수준의 담보 대출 지원을 했을 때 금리가 4%였는데, MB정부 때인 2009년 신용 대출로 바뀌었는데도 금리는 4%로 동일함. 담보와 신용에 따라 대출 리스크가 다른데 이자율이 같은 것과 관련해 분명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기획재정위원회-박광온(더불어민주당)-부동산 임대업 미성년자 대표 문제

- 올해 8월 말 기준 18세 미만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총 236명으로, 92%이상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음(217명). 이 중 85명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부동산 임대업은 미성년자가 상속·증여를 통해 손쉽게 사업장 대표가 될 수 있는 분야로, 박의원은 한 살짜리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며, 편법적인 증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김성수(더불어민주당)-본인확인서비스의 수익실태 고발

- 인터넷 쇼핑몰 등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로 통신3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 통신3사에 지급되는 건당 수수료에 비춰볼 때 최근 5년간 통신3사가 올린 수익은 1천억원에 가까움.
- 김성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통신사별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처리 현황(건수)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별 본인확인 서비스는 SK텔레콤 17억6천만 건, KT 10억7천만 건, LGU유플러스 8억7천만 건으로 총 37억건임. 통신3사는 영업이익은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건당 수수료가 SK텔레콤 23원, KT 30원, LG유플러스 30원임을 감안하면, 총수익 약 9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통신3사는 지난 2012년 12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휴대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관련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률 역시 급증하였음. 김 의원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이통사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늘었다며, 당시 통신사는 카드사와 함께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년 8월)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부가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병욱(더불어민주당)-국정교과서 밀실 추진

-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차 수정본인 개고본의 대통령 사진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대통령의 유네스코 특별연설 사진과 박정희대통령의 5.16쿠데타 이후 1963년 제5대 대통령 취임식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밝혀짐.
-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박근혜대통령이나 박정희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박근혜대통령 본인의 대외활동 사진과 박정희대통령 취임식 사진을 버젓이 게재. 교과서에 현 대통령의 사진을 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어진 10월 이후, 마지막 심의 단계에서 박근혜대통령 사진과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제외함.
-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은 그야말로 박정희를 미화한 박근혜 가족 교과서로, 교과서에 실려야 할 내용은 대외 업적이 아니라 치욕적인 국정농단이라고 함.

□ 외교통일위원회-김경협(더불어민주당)-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면 합의 문제

- 9차 방위비분담협정(적용연도 2014~2018)의 이행약정을 보면, '군사건설비' 항목에 8차 이행약정에는 없던 문구가 추가됨. 이는 주한미군이 기지 안에 특정

시설물을 지을 때 한국 정부가 현물 대신 현금 지원을 늘려주겠다는 것임.

- 박근혜 정부는 당시 협정이 비준·발효된 뒤에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행약정을 설명하면서도 '이면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감췄다. 이행약정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본협정과 달리 국회 비준을 필요로 하진 않음.
- 이면합의에 언급된 '특정 군사건설사업'은 미국의 최고 등급의 군사기밀정보를 다루는 특수정보시설(SCIF)로, 이 시설은 한국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도 접근이 통제될 만큼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며, 청와대를 비롯해 한국의 중요 기관들을 도청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춤. 미국이 한국 돈을 받아 한국 땅에 짓는 건물과 설비가 정작 한국 국민과 정부엔 실체를 알 수 없는 '유령 시설'인 셈.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유은혜(더불어민주당)-예술인 임금체불 문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유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예술인 임금 미지급 신고 건수는 416건, 액수로는 약 22억2000만원으로 전체 체불건수와 체불임금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금액별 체불임금현황을 보면 500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 체불 건이 전체의 73.8%를 차지.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몫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계약서 미작성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유 의원은 예술인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근절되기는커녕 체불건수와 체불액이 늘고 있고, 소액의 임금을 때이는 예술인의 비율이 높으며 신고되지 않은 임금체불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함. 문화체육관광부가 계약서 작성 등이 보편화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표준계약서 보급에 힘써야 함을 강조.

□ 국방위원회-김종대(정의당)-록히드마틴 특혜

- 우리 군이 지난 2013년 차세대 전투기(F-X) 3차 사업에서 입찰 자격도 안 되는 록히드마틴을 위해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
- 김종대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은 2013년 2월까지 F-X 사업 계약 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절충교역' 비율 50%를 맞추지 못함.
※ 절충교역이란?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관련 기술 이전 등 일정한 조건을 제시해 얻어내는 교역 방식으로, 방위사업법 및 절충교역 지침은 무기 경쟁 입찰·거래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의 50% 이상을 절충교역으로 추진하도록 규정

- 이 규정에 위배됐던 록히드마틴은 2013년 3월 뒤늦게 군사 통신위성을 추가하면서 절충교역 비율이 27.8%에서 63.4%로 올라 입찰 자격을 갖췄으나 통신위성은 우리 군이 요구한 절충교역 품목이 아니었음.
- 그러나 록히드마틴의 F-35A 전투기가 F-X 사업 기종으로 최종 선정되었고, 타당성 연구도 없이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하기로 확정.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F-35A 계약을 체결한 후 통신위성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에 따라 군의 위성통신체계 사업도 3년 지연됨.
- 김 의원은 F-X 3차 사업은 전 과정이 록히드마틴을 위한 것이었다며 통신위성 사업 지연과 국고 손실은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하도록 강행한 배후 세력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함.

□ 국방위원회-이철희(더불어민주당)-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공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의 근무원 정원증가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굵은 글씨로 표기돼 있음.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직접 친필 서명도 존재함.
- 이전에는 한해 7~8명의 신입 근무원을 선발했으나 2012년에는 79명을 채용하였으며, 이 중 47명은 댓글 공작이 이뤄진 530심리전단에 배치됨.
- 이 의원은 해당 문건을 가리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초가 되는 문건이라며 지난 2013년 수사 당시에도 김관진 전 장관과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꼬리 자르기로 덮였으며, 명백한 증거자료들이 밝혀지는 만큼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한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

□ 행정안전위원회-박남춘(더불어민주당)-소방공무원 건강 실태

- 2014~2016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판명을 받은 소방공무원 1만9천290명 중 소음성 난청을 앓고 있는 사람은 9천430명으로 48.9%를 차지함.
- 하지만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소음성난청을 이유로 공무상요양(공상)을 신청한 소방관 9명 중 단 2명 만이 공상 승인을 받았음. 2명은 훈련 시 강한 폭발음으로 인해 난청 공상을 인정받은 경우였음. 소방차 사이렌이나 구조·화재진압 장비 기계음 등 소방관들이 일상적으로 노출된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공상 판정을 받은 이는 한 명도 없었음.

- 박남춘 의원은 소방관들이 소음성 난청 위험에 노출돼 있고, 공상 승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로 소방청의 방관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소방조직 차원에서 소방업무환경측정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청력보호기 보급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

□ 행정안전위원회-이재정(더불어민주당)-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문제

-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노출 탐지 및 삭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최근 6년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이 운영 중인 20만개의 홈페이지에서 79만 2740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확인함.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에 요청해 삭제 조치 하는 개인정보 노출방지 사전 모니터링 사업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자 및 홈페이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이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노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모니터링 대상 유형별로는 중앙부처 6,763건, 지자체 10만 770건, 공공기관 11만 9,775건, 협회 및 단체 56만 5,432건 노출되어 삭제조치함.
- 이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반복되는 것은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함.

□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박완주(더불어민주당)-농가소득 하락 문제

-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농지담보대출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에는 대출액은 29조 7,874억원, 총 55만 566건임.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농지담보대출은 51조 4153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72.6% 늘어남.
- 농협조합원 신용불량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을 기준 1만 2626명, 등록금액은 총 1조 4147억원임. 또한 1997년 농가당 평균부채는 1301만원이었으나 지난해 2673만원으로 두배이상 증가함.
- 박완주 의원은 쌀 소득 하락과 농가부채 증가로 인해 농지담보대출이 51조에 달한다면서 농가 간뿐만 아니라 도농 간의 소득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 농민이 채무 때문에 농지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농정개혁과 쌀값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함.

□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황주홍(국민의당)-한미 FTA 재협상 농업인 배제 문제

-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와 철강 분야를 지키기 위해 농수산물 분야가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의해 '폐싱'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황주홍의원이 제출 받은 답변에 따르면, 통상본부는 미국과의 협상 시 주요 관계부처도 우리측 대표단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의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의 중이라고 답변함. 그러나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한미FTA 개정 협상과 관련하여 통상본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한 바가 없다고 답변함.
-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한미FTA 개정 협상 정보도 세 차례의 통상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동향정보만 공유 받았으며, 통상본부가 보안을 이유로 회의 자료를 회수해 가서 구체적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함.
- 황의원은 미국은 최대 15년 이상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한국의 농수축산 분야 관세를 당장 없애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미국 통상전문지에 보도되었으며, 이러한 요구가 있었다면 통상본부는 농식품부 및 해수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함.
- 황의원은 관계부처에게 회의 자료조차 공유하지 않는 것은 적폐이며, 농식품부와 해수부도 농수축산 분야를 지키기 위해 통상본부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함.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경수(더불어민주당)-전기세 복지요금 할인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개편으로 복지할인 계층 평균 전기요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복지할인 유형별 가구당 평균 할인요금 및 평균 납부요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누진제도 개편과 할인요금 확대로 할인 대상 가구의 평균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25% 줄어든 1만3000원, 평균할인 요금은 6000원가량 줄었음.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대가족의 경우 가족이 많을수록 과도한 징벌적 누진요금이 부과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요금체계라며 누진요금체계와 복지요금 할인체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한전의 복지요금 할인 정책으로 취약계층의 요금혜택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말함.

□ 환경노동위원회-강병원(더불어민주당)-건설회사 산업재해 은폐 후 산재보험료 할인

- 현대건설이 지난해 95건의 산재를 은폐해 639억원에 달하는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은 것으로 밝혀짐. 강병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대 건설업체가 최근 5년간 할인 받은 산재보험료는 9,416억원임.
-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는 3.9%로 총 51개 업종 중 5번째로 산재보험요율이 높은 업종이며, 건설회사는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장에 지급된 산재급여가 75% 이하인 경우 최대 50% 할인 받음.
- 올해 30대 건설회사는 평균 2.48%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았음. 현대건설이 지난해 95건의 산재를 은폐해 639억원에 달하는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은 것이 내부고발로 밝혀짐.
- 또한, 건설회사의 산재발생율이 높으면 정부가 발주한 대형공사에 감점(PQ제도)을 받게 됨.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은 약하고 산재은폐를 할 경우 감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산재은폐가 더욱 많아지고 있음. 강의원은 산재 은폐가 적발된 기업은 산재보험요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 국토교통위원회-윤관석(더불어민주당)-아라뱃길 물동량 저조

- 2조70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경인아라뱃길이 개통 5년차가 됐지만 물동량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윤관석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아라뱃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라뱃길의 물동량과 이용량이 당초 계획의 8.9%에 불과함.
- 아라뱃길 화물 이용량은 개통 5년차인 2016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8537톤을 목표로 했으나 실적은 762톤에 불과. 개통 4년차의 884만톤 보다 저조한 실적임. 여객 실적 역시 계획(60만9000명)대비 21.3% 수준인 13만 명임.
- 개통 5년차까지 3조214억 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실적이 저조하면서 아라뱃길 투자비용도 현재까지 1조6482억 원(54.6%)만 회수됨. 회수된 투자금도 대부분 국고지원(4603억 원), 단지분양(1조1391억 원)에서 실현됨. 항만시설관리권도 매각목표(1조831억 원)의 5.5%인 540억 원어치만 매각.
- 윤관석 의원은 거창한 계획아래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라뱃길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참담할 따름이라며 비판. 앞으로도 하천, 항만 관리를 위해 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투자금은커녕 운영비 회수도 요원한 상황이라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별도의 계획이나 향후 관리계획 필요.

□ 국토교통위원회-정동영(국민의당)-공공택지 매각금지

- 정동영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시민들로부터 수용한 땅인 공공재를 주거안정의 목적이 아니라 재벌 건설사들 먹잇감으로 제공했다며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확보한 공공의 땅을 매각하지 말고, 건물만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함.
- LH는 2010년 서초 A2 우면동에 3.3㎡ 1천30만 원에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서초 A1택지는 민간에 매각. 민간건설사는 1년 후 같은 택지구 내에서 3.3㎡당 1천900만 원에 분양. 강남 세곡지구 역시 LH는 2011년 3.3㎡ 당 980만원에 공급했으나 토지를 매입한 민간건설사는 3.3㎡ 당 2천만원에 공급.
- 정 의원은 부풀려진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봤자 결국 거품을 더 키울 뿐이라며 국민의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공공재 매각을 금지시키고 공공은 건물만 분양하고 택지는 공공이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

□ 그 외 이슈사항

- 자유한국당 국감 보이콧 : 자유한국당에서 10월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였으나 4일만에 철회함. 정우택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는 방송장악 음모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라고 말하며,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 복귀후, 공영방송이 사망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등을 착용하기도 함.
- 방문진의 보궐이사로 선임된 두 사람은 여당 몫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여당이 바뀌었으므로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인사 몫이어야 함.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 같은 논란을 우려해 애초 추천하지 않았고 방문진이 자체적으로 선임하도록 함. 한국당 주장대로 보궐이사 선임을 자신들 몫으로 한다는 것은 방문진 이사 선임을 독점하겠다는 억지주장이며, 지난 10년간 공권력에 복종하며 수많은 언론탄압을 주도했던 전 두 정부의 행태가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는 중에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함.

3 국정감사의 한계와 개선사항

□ 준비 및 전문성부족 개선

매년 국회의원들의 준비 및 전문성 부족으로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하지 못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피감기관에서는 같은 의원실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자료 요청이 있는 등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함. 의원실에서는 요청자료를 관리하여 중복자료 요청을 피하고, 의원당 감사해야 할 기관이 너무 많다면 보좌관 수를 늘려 효과적인 국정감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연중 상임위별 켈런더식 상시국감 도입

일회성 국감이 아닌 연중 감사활동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임위별 상시국감 도입이 필요함. 상시국감 도입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이 수월해지는 등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음.

□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피감기관 자료제출거부 및 위증 등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 2017년 1월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 진술하거나 증언하는 사람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위증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하는 법안을 개정 발의함. 국민의 혈세로 국정이 이뤄지는 만큼 관련 처벌도 강화해야 함.